# 지방자치실천포럼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03

March 2014 I vol.5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지방자치실천포럼**
–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시대를 열자
: 김문수 경기도지사
– 포럼 위원 토론 요약

**특별대담**
–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슈대담**
–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권영세 안동시장

**이달의 Issue**
– 교육자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04



13

# CONTENTS


## 이달의 Issue

– 교육자치

04 **지방자치실천포럼**
–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시대를 열자
: 김문수 경기도지사
– 포럼 위원 토론 요약

13 **특별대담**
–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22 **이슈대담**
–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권영세 안동시장

39 **논단**
–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 방향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구조 개선 검토

48 **해외우수사례**
– 선진국의 지방 교육자치제도 미국, 일본, 독일







53 **지방자치단체 탐방**
– 비류 백제의 도읍지인 문학산 주변에 조성된 '학산 둘레길'
– 풍부한 수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광 메카를 꿈꾸다

62 **연구원 동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천포럼 통권** 제56호 /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종 / **편집위원장** 금창호 **간사** 전대욱 **위원** 주재복 윤영근 김도형 김성주 **담당** 탁영지 / **연락처** T 02·3488·7300 F 02·3488·7309 / **홈페이지** www.krila.re.kr / **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 본 지방자치실천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실천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 「지방자치실천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이승종)은 지난 2013년 6월 26일에 지방자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방자치실천포럼」을 창립하였다.

「지방자치실천포럼(공동대표 : 박재창 교수, 이승종 원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업의 장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포럼 목적
-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지방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철학의 공유 및 실천적 대안 논의
- 지방 현안과제에 대한 관-학-연간 소통 및 대안모색 기회 확대

■ 포럼 구성
- 공동 대표 :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이승종(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정부(중앙, 지방)-학계-연구원 등 55인의 인원 구성
- 구성 원칙 : 지방자치 관련 학(행정학, 재정학, 지방자치 관련 주요 학회 및 대학, 언론 등)-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협의회)-연(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계에 의한 지방자치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중기 발전 모델 :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며 지역순회를 통한 국민 담론의 장으로 발전

■ 기조연설
- 1회 :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지방자치의 과제(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 2회 :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전략(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 3회 : 국민행복시대의 지방자치(김동완 국회의원)
- 4회 : 다원주의적 지방거버넌스의 진화(이달곤 전 안전행정부장관,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 5회 :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왜 & 어떻게(최외출 영남대학교 부총장)
- 6회 : 지역행복생활권과 지역발전정책(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 7회 : 지방자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 8회 :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시대를 열자(김문수 경기도지사)

## 김문수 경기도지사

#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시대를 열자

저는 지방선거는 잘 알지만 지방자치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하며 지방주민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주민은 투표 행위만 하며 중앙정부가 그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지방의 의제가 선거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8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통문제가 가장 문제라고 여론 조사 결과가 이야기합니다. 교통 중에서도 특히 서울로 가는 교통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 되어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전혀 관련 없이 자치단체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여 GTX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보았지만 이 문제는 약간만 해결되었을 뿐 여전히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GTX라는 것은 다양한 학회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재정, 다른 광역단체와의 관할권 문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만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만 해주냐는 불평이 나오며, 또한 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중앙의 입장에서도 수도권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면 다른 지방에도 한 가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국립공원의 문제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수천 개의 섬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도 어렵고, 그곳에 레저 시설이나 휴양 시설을 짓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섬에 배를 정착시키기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배를 정착시키려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시설을 짓기 어려울뿐더러 중앙에서 허가를 내어주지도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만,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에서 느끼고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아는 경우가 있지만 지방 정부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AI 문제를 살펴보면, 현재 간이 검사는 각 도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 판결은 전국에서 단 한 곳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진 판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AI가 더 빨리 확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도에 확진 판결이 가능한 수많은 수의사들이 존재하지만 중앙에서는 여전히 이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그린벨트 비중이 매우 높은 지자체에 속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이러한 그린벨트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지방에 해제권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금자리 주택 중 83%가 경기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잉 공급된 보금자리 주택이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가 아닌 지역이며, 동시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주택과 토지 이용계획이 다 지방 자치로 가능하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는 출마자들을 볼 때, 과연 출마자들이 이러한 지방 문제의 현안과 지방자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해결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지사님이 말씀하신 현안 문제가 중앙정치권을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얼마나 실제로 실행이 될지 염려가 됩니다. 토지 주택 정책 조사를 해본 결과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지사님의 의견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저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해보면 지방 정부는 토착 비리, 호화청사 등이 우선적으로 인식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가 실행되기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운 지방정부와 같이 언론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방자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소진광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지방자치가 20년 가까이 이야기만 되다보니, 지방자치에 지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정당공천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여과장치를 작동하여 공천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장을 하시면서 기초자치단체와의 권한 다툼이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저는 기본적으로 도지사는 시장과 군수를 도와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군수는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지사로서 기초자치단체와 권한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양 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제주도와 같이 과감한 자치권을 부여하여, 낙후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단계적인 개발을 통해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적용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 또한 제주도를 생각해볼 때, 중앙에서 좀 더 자치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도서지역에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있는데, 후에 중앙정치에 진출하셨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실 것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저는 제주자치도가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도권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 지역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지방과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저는 오늘 강연하신 것과 같이 중앙정치에 나가셔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을 견지하실 것인지, 그것을 통해 잃는 것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제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는 말씀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할 이야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손해를 생각하기보다는 지사로서의 직분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올바른 것이지 사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심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동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여태까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특위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들은 국회에서 나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여태까지 지사님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슷한 지방분권과제가 무려 17년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정부들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진정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저는 헌법 개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없으며, 국회에서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또한 실천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는 속도보다 언론이 흔드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언론이 좀 더 지방정부에 협조적인 역할을 맡아주셔야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 충청권의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상생발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일시 및 장소** / 2014.2.27(목) 세종특별자치시장실
**인터뷰 대상** /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인터뷰 진행** /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종 원장 : 세종시 초대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 9개월가량 됐는데, 그간의 시정운영 성과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유한식 시장 : 우리 시는 그동안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시의 굳건한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1년 9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시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굵직한 일들은 대부분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후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냈고, 농정원 등 공공기관과 대전보건대학교 유치, 특히, 연서면 항공부대이전 · 통합 조정안을 성사시켜 주민이 올바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명학산단 등

3개단지 조성과 60여 개 유망기업을 유치했으며 서울대병원 위탁 세종시립의원 개원으로 세종시에도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승종 원장 : 세종시가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한식 시장 : 우선, 인구 80만의 안정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세종시 발전의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 간 균형발전입니다.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해 지역별로 특성화한 개발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셋째, 교육도시로의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 유수의 명문대학을 적극 유치하고 스마트 교육환경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교육도시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오는 2020년까지 예정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발전의 핵심시설 유치에 노력해야 합니다. 대형병원, 쇼핑센터, 교통환경, 호텔과 같은 핵심 기간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승종 원장 : 현재 세종시에 여러 정부부처가 이전을 마무리 했지만, 당초 예정됐던 미래창조 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일부 기관이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최근 안전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한식 시장 : 미래창조과학부 · 해양수산부는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돼야 합니다. 현행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에서는 이전 제외 대상을 국방 · 외교 · 통일 · 안행 · 여성 · 법무 등 6개 부처로 명시하고 있어, 신설부처의 세종시 입지는 법적으로 명백한데도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힌 만큼 안전행정부에서 공청회, 고시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결정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안전행정부의 세종시 이전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는데, 그간 끊임없이 대두돼 온 안전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의 필요성이 이제 입법화 수순을 밟게 됐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와 정부세종청사 정부부처의 이원화된 구조로 부처 간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안전행정부 자체가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과 분권 강화는 물론 공무원의 인사관리 · 후생복리 등을 총괄하고 있는 업무 특성상 세종시 이전은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승종 원장 : 5대 권역별 특성화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유한식 시장 : 예정지역은 국가에서 22조 5,0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도로, 문화 · 복지 구축 등 우수한 정주환경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읍면지역은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계획이 없어 시민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전역을 5대 권역별로 나눠 발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특성화계획은 읍면지역의 교통, 문화, 교육 수준을 건설지역과 비슷하게 끌어올리고, 대학유치, 산업단지 조성, 첨단농업 육성,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북부권은 IT · BT 등 첨단산단, 묘목특화단지 및 운주산 및 비암사 등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등 특화산업과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중부권은 공공기관 중심의 행정타운과 세종비즈센터 건립 등을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 등 행정지원과 네트워크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서부권은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역사 · 문화벨트 구축, 문화 · 여가를 위한 도시문화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부권은 명학산단, 중부내륙권 물류 기지 등 첨단산업과 물류 중심지로, 남부권은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R&D 및 정주환경 지원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승종 원장 :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재정증액 규모는 어느 정도 이신가요?



유한식 시장 : 세종시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시급한 세종시의 재원을 어떻게 확충하는지에 대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 1년 6개월여 만에 마침내 특별법이 통과돼 시의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보통교부세는 5년에서 8년으로 3년 간 연장돼 25%를 추가 지원받게 되어 매년 300억 원 이상 증액이 기대되며,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으로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해 읍면지역 공동화 방지와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이 설치됨으로써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실링한도액이 확보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승종 원장 :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올해면 마무리될텐데,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유한식 시장 : 우선 세종시의 정상건설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구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획대로 해결해 나간다면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서,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세종시에 대해 폭넓은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전공무원도 이제 서울 중심의 시각을 버리고 행정수도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라는 적극적 사고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승종 원장 :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기획단이 지난 2월 3일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는데, 그 의미와 역할을 설명해 주시죠.

유한식 시장 :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기획단은 우리 시, 대전, 충남 · 충북 등이 공동으로 충청권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 ·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출발단계인 준비단 성격이지만 상설기구의 발족 일정을 모색하는 것 외에 문화 · 생활 · 관광 · 생태권 조성 등 공동 과제를 논의하는 등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충청권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창출의 산실이 될 것이며, 충청권 시 · 도간 경계를 넘어 광역생활권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간 충청권 광역화 논의는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으며, 충청권 스스로 광역도시권 전략의 당위성을 인식한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단에서 충청권 공동발전은 물론 국민대통합 및 화합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승종 원장 : 젊은층이 세종시로 유입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대학이나 기업이 많이 유치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지요?

유한식 시장 : 세종시는 지난해 말까지 4만여 명 이상 증가했고, 젊은층의 유입이 두드러짐에 따라 젊고 활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대학이나 기업유치가 매우 절실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연서면에 대전보건대의 실질적인 유치를 확정하고 2018년까지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는 전의면에 수도권 소재 30여 LED기업, 소정면에 2017년까지 수도권 소재 33개 기업, 명학산단에 ㈜다모테크 등 10개사, 전동면에 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 '녹색 R&D 파크' 유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콜마와 338억원 규모의 아시아 최대의 기초화장품 제조공장 신축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국내 최대 종합특장차 기업 이텍그룹과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0일 수도권 지역 국내 유망 중소기업 ㈜신안피앤씨 등 6개사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들은 2016년까지 부지면적 10만 2,000㎡에 총 670억 원을 투자해 5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이승종 원장 : 외부인구가 대규모로 이주함은 물론 청원군과 공주시 일부가 편입돼 시민대통합도 중요한 과제인데 대응책은 있으신가요?



유한식 시장 : 세종시는 원주민 외에 이주민, 편입지역주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이 분들이 하나로 화합하지 않으면 진정한 명품 세종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가 출범 하자마자 원주민과 이주민, 장군면 · 부강면을 포함해 '세종시는 세종시민, 오직 하나로 존재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읍면동별 체육대회, 연말연시 해맞이, 해돋이행사, 문화예술전시회, 동아리 활동, 주말농장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복숭아 축제를 통해 도농상생의 세종시 이미지를 높이고, 도원문화제와 왕의물 축제를 하나로 통합, 제1회 세종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화합의 분위기를 높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문화 · 예술행사 기반을 구축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소통의 시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종 원장 : 사람들이 세종시로 많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세종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세종시의 관광자원을 소개해 주시죠.

유한식 시장 : 세종시 곳곳에 숨은 관광명소와 먹을거리가 많으며, 시 전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입니다. 예정지역에 있는 정부세종청사(옥상공원 3.3km)는 당초 설계대로 완공되면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인 건물이며, 국립세종도서관과 세종호수공원 등 완공으로 시민 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녹지율 52%인 세종시는 금강과 어우러진 호수공원, 오토캠핑장, 산림 박물관과 자전거길(약 360여㎞)이 조성되고 있으며, 5無 도시(입간판, 전봇대, 담장, 쓰레기통, 노상주차)를 지향하는 친환경 도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뒤웅박고을, 베어 트리파크, 비암사, 오봉산, 운주산 및 고복 호수공원 등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먹거리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치원 복숭아, 배, 머루포도, 토담감자 등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복잡한 도로, 교통 및 생활 여건과 비교할 때 한결 풍족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세종시입니다.

이승종 원장 : 세종시가 아직은 완성된 도시의 모습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명품 도시 세종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유한식 시장 :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뚜렷한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는 서울면적의 3/4 크기로 규모면 에선 작지만, 행정기능이 중심이 된 '세계 에서 가장 살기 좋은 20대 명품도시'로 건립된다는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까지 2단계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 등이 이전을 마쳤고,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이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편의시설 등 제반시설이 미비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3단계 이전이 완료되고 아파트, 정주여건이 갖춰지는 올해 말이나 내년 말이면 명품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30년까지 세종시 인구 80만을 목표로 도시기본 개발계획을 담은,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지난 2월 20일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승종 원장 :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유한식 시장 : 지난해 2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개막 됐습니다.
세종시는 세종시민만의 도시가 아닌, 국가에서 철학을 갖고 만드는 도시이며, 충청권의 핵심으로 신수도를 이끄는 상생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화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3.0지원센터 소장)

##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일시 및 장소** / 2014. 2. 18.(화) 남구청장실
**인터뷰 대상** /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터뷰 진행** /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전대욱 수석연구원 :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평생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전국 120개 평생학습도시의 구심점인 '전국평생학습 도시협의회'의 회장이시자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전국적인 명성이 높으셔서, 교육자치를 주제로 하는 본 지방자치포럼의 인터뷰에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자치에 있어서 평생 학습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선 평생학습도시와 그 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우섭 청장 : 저는 교육자치, 나아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판단력과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은 이렇게 주민역량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만약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지방자치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평생학습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평생학습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 핵심원리이며, 지역주민의 학습활동 지원과 촉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은 지역주민의 자아실현뿐 아니라, 사회 통합, 지역경쟁력 향상 등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더불어 평생학습도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평생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교육부가 지정한 전국 시 · 군 · 구 자치단체로,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평생학습에 힘쓰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20개가 지정되었고, 이후 2004년 지정된 도시간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평생학습도시 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는 120개 평생학습도시인 자치단체뿐 아니라 해당 시 · 군 · 구의 지역교육지원청 7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에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회원도시들이 공유하여 지역 평생학습관에 대한 중요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등 평생학습도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평생학습 관련 공동협력에 관한 사업을 구성하고, 평생학습도시 업무 추진을 위해 각종 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평생학습도시 홍보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전대욱 수석연구원 : 우리나라 도시들의 평생학습과 주민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구청장 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단체에서의 '평생학습'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민센터나 여성회관 등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혹은 지역 내 교육동아리의 운영 등을 떠올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남구청 에서는 특이하게도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 만들기'를 주요 구정추진 과제로 제시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을 만들기라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등의 견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구정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특별히 평생 학습을 통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박우섭 청장 : 저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끼리 스스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나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이를 초기에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찾아가는 '학산콜 강좌'나 '학습동아리'와 같은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민들에 의한 마을 만들기 초동주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주민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동의 목표와 공동체를 형성 하게 합니다.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학습의 기반이 되면서 주민들이 지혜로워 지고, 이를 통해 각종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인천 남구에서는 2011년부터 주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주민참여형 창조적 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정주하고 싶은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학교교육에서 토론과 민주성에 대한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활동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해서 3년 전 이러한 시도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기 어려울뿐더러 그 성과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아, 예산을 투입하여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긴 과정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주민들 간 서로 배우고, 생각하고, 나누고, 즐김으로써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주민,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대욱 수석연구원 : 학습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즉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 만들기'의 의미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인터뷰를 오기 전, 많은 분들께서 제게 인천 남구에 가면 마을 만들기 사례인 '통두레 운동'에 대해서 질문할 것을 추천하시더군요. 아울러 이 유명한 사례는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추진의 결과라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박우섭 청장 : 현재까지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지역공동체의 해체나 사회양극화, 각종 지역문제 등이 존재하고, 그 결과로 주민 개개인의 행복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그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문제의 해결책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설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또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선이 무엇인지, 더불어 함께 행복하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시민적 지혜'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적 덕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동 단위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 단위에서는 사람도 많고 그 범위도 크기 때문에 생각만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5백 명에서 1천 명 정도 되는 통 단위에서, 전통적인 두레정신에 입각하여 주민 공동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통두레 모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두레는 통장 등 지역의 리더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쓰레기, 주차, 방범 · 안전, 육아, 환경 등 지역 현안문제를 고민하는 모임입니다. 이를 위해 통장 800여 명을 대상으로 통두레의 정신에 대해서 학습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통두레 모임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약 2년여에 걸쳐 70여 개의 통에서 모임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시행착오들을 개선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두레 모임을 통해 주민들은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웃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서 공동체 형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의 주안3동 기흥주택의 경우, 통두레 운동을 통해 주민들이 모이면서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구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중 「도시농부학교」를 주민들이 요청했고, 학습을 진행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이 '기흥텃밭'으로 가꾸어지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향심이 커졌는데, 이러한 우수 사례들이 나오면서 다른 모임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중요합니다. 흔히 주민들의 주인의식은 한국 사회에서 왜곡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청장을 뽑아 놓았으니 이제 구청장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요구합니다. 요즘은 눈이 오면 면사무소에 집 앞의 눈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고도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주민이 눈을 치우면 이상한 사람처럼 본다고도 합니다.

구청장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듯이, 주민들 스스로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고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주인으로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통두레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주인의식과 자긍심, 애정을 갖게 하고 남구 주민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대욱 수석연구원 : 구청장님의 열정적인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마을 만들기와 병행 하여 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이나 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혹은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우섭 청장 :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주민이 중심이 된 '주민참여형 창조적 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하고 싶은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남구의 마을 만들기는 하향식 전달이 아닌, 주민 주도의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더 행복하고 살기좋은 마을로 가꾸어 나가는데 힘을 싣고 있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주민모임은 마을학교에서 같이 학습하며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마을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 이후에 사업비를 지원

받아 그 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두레 모임과 연계하여, 남구 주민이 5인 이상 모인 곳이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단기간의 성과를 거두기보단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변화하고, 그 마을이 변화하는 장기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따뜻한 마을을 꿈꾸는 지혜로운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대욱 수석연구원 :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구정추진 성과가 가시적으로 창출되기 시작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혹시 교육부나 기타 중앙부처 등 중앙 정부나 광역시에 제도개선 등 제안이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박우섭 청장 : 교육이나 학습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 물이 빠져나가도 여전히 콩나물은 자란 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생학습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바라는 행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의 정책환경은 단기적 성과를 수량화하고 정책환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는 쉬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물이 빠져나가면 정책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하고, 평생학습 성과평가 체계를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하여 평생학습도시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은 현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의 국정추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한편 이렇게 일자리에 치중한다면 평생교육에 임하는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은 자원봉사 혹은 사회적 공헌의 차원에서 주민역량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를 심화시켜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행복 실현과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교육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평생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부 예산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 관심이 높고 예산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삶과 학습의 요구는 매우 다양합니다.

정부부처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과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국민의 행복 실현과 함께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자치능력 함양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부와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이 하향식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아닌, 중앙과 지역 간의 유대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평생학습도시 현장과 중앙의 연결고리 역할로써 하나의 유기체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대욱 수석연구원 : 한편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교육감 등의 선거제도 개편 등 많은 의견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이나 지방교육재정의 분담문제 등 다양한 관련 이슈에 대해, 지난 민선5기 인천광역시 남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자치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우섭 청장 : 지방자치에서 교육자치의 문제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교육자치가 엄격해진다면 지역의 재정여건이나 지역별 소득격차 등으로 인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 계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구의 어린이들은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참으로 순수하고 훌륭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만약 수월성 교육 중심으로 간다면, 우리 구 아이들의 훌륭한 장점들이 묻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자치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교육자원의 이용 등 여러 가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자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러닝메이트제로 바뀐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과 교육감이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지방 자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의 이기심이나 경쟁주의, 1등주의에서 점차로 이타심과 배려, 협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연대협동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고 인천 남구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여-야를 망라하고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통해 결국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모범적인 지방정부의 사례가 나오고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10년이나 20년 등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희망적입니다.

전대욱 수석연구원 :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위한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엄청난 독서광으로 유명하신데요, 혹시 최근에 읽으신 책 중에, 본 포럼을 읽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나 혹은 기타 독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추천을 부탁 드리고, 아울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조언도 부탁드리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섭 청장 : 새사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정태인 원장과 이수연 연구원이 쓴 「협동의 경제학」이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혹은 정치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기반이 되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심이나 경쟁 기반의 성장과 발전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타심과 배려, 신뢰와 협동에 기반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만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에 확신을 보태주고 있으며, 저희 남구에서 하는 통두레 운동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되어서 제게는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즉 정당정치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사회적인 자본에 대한 옥스퍼드의 학자, 다스 굽타(Das Gupta)의 정의도 도움이 됩니다. 다스 굽타는, "사회적 자본이란 합의된 상호 경제 강제 구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있도록 하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이다"라고 말하면서, 합의된 상호 경제구조를 잘 만드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주민들은 주어진 약속에 대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주민들 간의 상호 합의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입니다. 이 책에 대한 일독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바라는 점은,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리더들을 위한 역량강화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체장들은 처음 당선되면 실제로 거의 독학을 하게 되고, 학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단체장 등의 교육이나 학습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양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널리 공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멀리까지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담 · 정리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권영세 안동시장

# 품격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행복안동을 만들고 있는 권영세 안동시장

**일시 및 장소** / 2014. 3. 6.(목) 안동시장실
**인터뷰 대상** / 권영세 안동시장
**인터뷰 진행** /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주재복 연구위원: 시정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동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로 안동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과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세 시장 :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시점을 맞았네요. 무엇보다 안동 최초의 대기업 유치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SK케미칼 백신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지난해는 SK케미칼 제2바이오공장도 유치했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에 이어 SK같은 우량기업이 안동에 둥지를 틀면서 중소규모의 기업입주도 이어져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확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로 여겨지던 수자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주변의 전통문화자원과 풍부한 수자원을 결합해 레저와 문화체험 등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개목나루를 복원하고 수상스포츠 카누센터와 호반

나들이길 조성, 임하호 수상레저 타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도 착실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가족호텔이 문을 열고 휴그린 골프장, 유교랜드를 개장하면서 경북관광산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호텔도 첫 삽을 떠 내년 말이면 문을 열 것입니다. 도산 동부리 일원에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 파크 등 3대문화권 사업도 내후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중소도시 규모에서는 최초로 열린 2013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역대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 냈다는 평가와 함께 안동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안동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농업경쟁력 강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동시의 농업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세 시장 : 한-미,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면서 실제 농민들의 주름살이 펴질 날이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급적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회계의 14%인 9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특화작목 재배단지확대, 강소농과 부자농업인 육성, 고품질 쌀 수출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는 안동사과와 안동산약, 안동한우가 '올해 소비자가 뽑은 2014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에 올랐고, 안동사과는 「2013농식품 파워 브랜드」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안동의 농산물을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과 러시아까지 확대하고, 사과수출이 중단됐던 대만시장도 새로 열었습니다. 현재 안동의 농특산물은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으로 20여 개국에 30여 개 품목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과 가격 변동이 큰 무 · 배추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무 · 배추 출하조절센터」와 농업의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천연색소산업화센터」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친환경 축산 육성,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적극적인 투자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찾아 갈 것입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안동시의 '국제탈춤 페스티벌'은 이미 대한민국의 명예대표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을 세계적인 대표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발전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세 시장 :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은 세계의 다양한 탈과 캐릭터, 그리고 모든 변장 도구를 모아서 세계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축제로 진화해 왔습니다. 축제 참여자들은 다양한 탈과 의상, 소품, 오브제를 활용해 자신만의 세계를 표출해 왔습니다. 댄스와 드라마, 마임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대동의 축제, 즉 관광객들을 동화시켜 함께하는 축제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축제장에서는 전 세계 전통과 현대 탈춤, 인간의 상상력이 녹아내린 다양한 문화를 만나면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밤이 되면 탈을 쓰고 대동난장을 펼칩니다. 탈을 쓰면 인종과 민족, 남녀노소, 신분과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가 열립니다.




앞으로의 축제도 안동문화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 고유성, 선도성을 탈춤축제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세계인들의 감성을 자극할 것입니다. 또한 탈이 가진 보편성과 창의성으로 탈춤축제를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탈이 가진 본래의 문화적 특성에 충실하면서도 이를 활용한 문화 재생산을 꾀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재미를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탈춤축제는 탈을 쓰는 순간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로 변해 열광과 신명이 교감되는 장으로 세계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장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제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안동시가 주도해 설립한 세계탈문화예술연맹(IMACO)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IMACO에는 현재 전 세계 56개국 131개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총회에서 민간 국가자문기구로 인가·등록되면서 유네스코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틔웠다. 이제 안동국제탈춤축제는 유네스코 자문 기구가 주도하는 글로벌 축제로 우뚝 설 것입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신도청 시대를 맞아 안동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세 시장 : 우리 시는 2020년 1,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5개 분야로 구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숙박거점 복합휴양단지인 안동문화관광단지는 2012년 가족호텔이 문을 열고 지난해는 핵심 집객시설인 유교랜드와 안동휴그린 골프장이 문을 열면서 경북북부 지역 관광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착공에 들어간 100실 규모의 베니키아 그랜드 호텔도 내년 말 문을 열어 숙박객을 맞게 됩니다.

전통문화와 수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곡동 민속촌에 100억 원을 들여 한자마을이 조성되고, 낙동강 상류 나루문화체험장인 개목나루도 다음달



문을 엽니다. 임동면 중평리와 수곡리 일대에도 2016년까지 수상레포츠와 수상골프 연습장을 갖춘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형 관광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원이엄마테마파크를 귀래정 부근에 조성하고 아들 낳기를 빌던 풍속을 테마로 와룡면 태리에 자웅암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산면 서부단지는 스토리빌리지로 조성합니다. 또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성덕교, 경북유교문화회관 등 다양한 종교가 밀집해 있는 목성 · 화성 · 법상동 일원에는 내후년 준공을 목표로 「안동종교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 호국을 기반으로 정신문화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일직남부초등학교 터에 권정생어린이 문학관이 준공됐으며, 안동문화관광단지에는 소천 권태호 음악관이 조만간 문을 열게 됩니다. 또 임동면 수곡리 기양서당 부근에는 안동충의역사체험장이 들어서고, 도청이전지와 학봉종택 부근에는 서애와 학봉호국역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교문화 거점도시로 부상할 3대문화권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진입로와 본단지 기반조성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내후년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안동시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9% 정도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하여 안동시의 복지구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세 시장 : 우리 시의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6만 8,467명입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3만 2,558명으로서 19.3%에 이르고 있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우리 시 예산의 27%인 1,886억 원이 복지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노인복지와 청소년 사업,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육 및 여성복지, 취약계층지원, 주택,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도 경로당 신·증축과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돌보미 사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전개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복지서비스 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등 내실있는 보육사업 및 아동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도 한부모가족 지원, 모자보호시설 지원, 여성복지회관 신축 등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여성복지,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지원·장애인 복지,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여성복지 및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안동시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 등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안동시는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에 대비한 준비는 어떻게 하셨으며,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추진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세 시장 : 신도청 청사가 공정률 60%를 넘기면서 전통기와 형태의 지붕이 경북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공공청사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는 올 연말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뜻이 강해 올해가 실질적으로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도청신청사 좌측에 위치해 6층 건물로 내년 6월 준공과 이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고 경북지방경찰청도 내후년 이전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 건설사업은 1단계로 올 연말까지 신도시 진입도로, 유관기관 이전, 주택, 학교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는 10.96㎢ 면적에 인구 10만 신도시로 조성됩니다. 202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행정기능과 주거 상업시설, 산업연구테마파크 등 자족도시로 건설될 것입니다.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성장, 행정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성장 주도 '생태도시'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 가는 '명품 행정 · 지식산업도시'를 개발전략으로 하고 있다.

신도시 조성으로 자칫 기존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태사묘에서 웅부공원 등 중구동 일원에 ▷ 안어대동(安於大東) 뜨락길 조성 ▷ 참손맛댁 ▷ 한옥 숙박촌 ▷ 도시재생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창조센터 ▷ 웅부거리 연결로 도시디자인 ▷ 편의시설 ▷ 성곽 동문 상징화 사업 및 읍성길 재현 ▷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 8가지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함께 안동역사(驛舍) 이전으로 인한 기존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전되는 안동역사 부지에 대규모 문화광장과 컨벤션 센터와 기존 도심과 낙동강을 잇는 하늘공원을 조성, 전통 한옥마을 조성, 폐선부지 산책로 및 자전거길 조성 등 차별화된 안동만의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민선6기가 출범하는 2014년 한 해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세 시장 :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는 올해 안동은 300만 웅도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첫 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1896년 8월 4일 23개 관찰부를 폐하고 13도제(道制) 개편에 따라 잃었던 부(府)의 지위를 무려 118년 만에 다시 찾게 됩니다. 우리는 신도청 시대 개막과 함께 그동안 쌓아 온 역량을 바탕으로 안동 발전의 전환점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것입니다.



웅도경북 신도시를 명품녹색도시로 조성 하고, 우수한 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안동 방문 이후 힘을 받고 있는 문화융성 정책을 선도 하고, 신도청 소재지에 걸맞는 미래지향 적인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고품질 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다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사람 중심 교육 도시와 청정스포츠도시 구축, 그리고 자치 역량 제고로 시민감동 행정을 실현 한다는 8가지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안동 발전의 주춧돌을 놓아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7월에 열리는 세계유교 문화포럼 등을 계기로 안동을 세계적인 인문가치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유교와 유학에 기반한 안동의 정신과 인문적 가치를 세계 보편적 가치로 만들어 현대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담 · 정리 주재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 방향



**최영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감에 대한 선출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실질적인 의미의 교육자치제가 출범한 1991년 이래, 교육위원회에 의한 간선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방식을 거쳐, 2007년부터 주민직선제로 변경되었다. 그 결과, 2010년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바 있다. 그 이후 주민직선된 교육감 체제하에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 오면서 부패와 비리 등 각종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공약으로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거공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한 개선책들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6월 4일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주민직선제로 선출될 예정이다. 주민직선된 교육감 체제하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선거과정에서의 낮은 인지도, 선거 비리,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부패 등과 같은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은 현 선거체제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도 발생될 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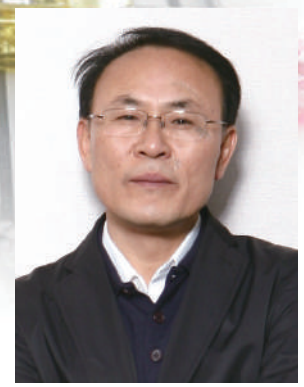
여전히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감 선출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들은 현재의 주민직선제에서부터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제에 이르기까지 약 10가지에 이른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구상하는 관점을 보면 일반 행정학자들과 교육행정학자들 사이에도 상당히 의견차이가 있고, 각 기관들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기관마다 다소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안은 두 가지 대안 중에서 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의 공동등록제이며, 다른 하나는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제라고 생각한다. 시도지사 임명제는 간단한 문제이나 공동등록제는 약간의 설명을 요한다.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는 주민직선제를 시행하되, 교육감 후보와 시 · 도지사 후보의 공동등록과 공동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주민직선제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교육감과 시 · 도지사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고,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대안으로 논의되었던 러닝메이트와 달리, 임명제와 수직적인 상하관계로서가 아니라 직선제와 수평적인 협력관계로서의 개념으로 상정한다. 이 방안에서도 교육감 후보의 정당 배제는 유효하고, 시 · 도지사 후보와의 공동선거운동은 허용한다. 즉, 이 방안은 교육감과 단체장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선택을 용이하게 하며, 선거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즉, 선거비용제한액과 기탁금을 현행의 절반으로 낮추고, 선거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유권자는 별도의 투표용지와 투표기호(단체장 1명, 교육감 1명)에 각각 투표하되, 공동등록 후보자에게 동일한 투표기호를 부여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단체장 후보자의 게재 순위와 같게 하며, 각 투표용지의 성명 및 괄호 안에 공동출마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단순한 형태의 주민직선제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대폭 해결해 줄 수 있다. 첫째, 유권자가 단체장과 짝을 이룬 교육감 후보의 성향을 정확히 알게 된다. 둘째, 교육감 선거비용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정책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이 방식을 택하는 경우, 선거비용이 현재의 1,275억 원 수준에서 절반인 64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아울러 선거감시 관련 비용도 현재보다 약 30~40%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교육감 선거 관련하여 매번 문제되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정책선거로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지금껏 표출되고 있는 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들이 원천적으로 줄어들게 하여, 교육을 위하여 지역사회가 같이 노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방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법률적 논쟁을 피하면서도 현행 단순한 주민직선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대안은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제이다. 이 경우, 교육감의 지위는 교육부지사로 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한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한다. 교육부지사가 교육에 관해서는 거의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교육부분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방식이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이나 교육서비스의 제공 면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는 선진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되어 있는 바 통합적 성격을 살리면서 한국적 현실성을 접목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제기와 동시에 교육학계에서의 반대가 예상된다. 이 두 제도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바, 지방자치 정신을 감안하여 해결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각각 시도지사 임명제와 공동등록제를 동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시도에는 지금과 같은 주민직선제를 실시하여 3개 제도의 성과를 동시에 평가한 후에 최종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구조 개선검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Ⅰ. 문제의 제기

교육은 지방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지방교육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자치와 달리 교육자치를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분리 관장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체제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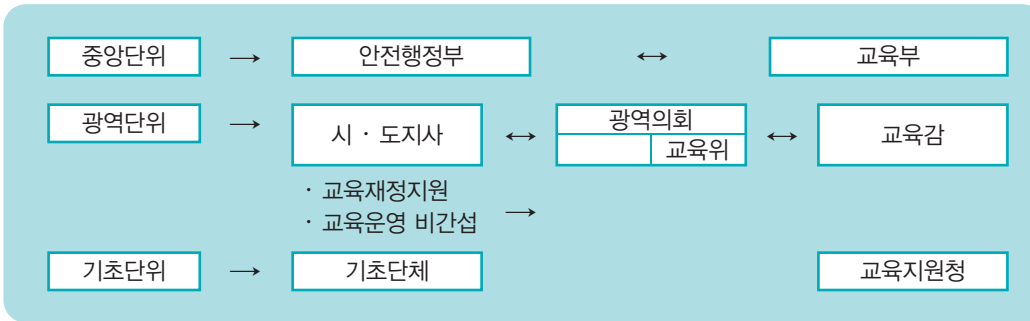
그러나 역대정부의 정책적 대안모색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체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새누리당이 지방자치의 개혁과제의 하나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는 박근혜정부에서도 해결이 필요한 현안과제의 하나로 남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실태와 문제를 개관하고, 해결방향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2. 양자 간의 관계실태와 문제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구조는 교육사무의 분리관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기구와 기능 및 재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구적 측면에서는 의결기관의 통합구조와 집행기관의 분리구조가 원칙이되,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를 통해 상호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광역단위로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를 감안하여 광역단위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구조를 보면, 의결기능은 광역의회의 단일구조로 되어 있으나, 집행기관은 교육자치의 교육감과 일반자치의 시·도지사로 분리되어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다음, 기능적 측면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담구조가 원칙이되,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의 수행은 상호간 협력체제를 확보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나, 동법 제121조에 따르면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 광역자치단체별 시도교육청을 설치하고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시·군·자치구의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적 지원토록 하여 상호간 협력체제를 확보하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교육자치에 필요한 전입금과 경비보조에 대한 일반자치의 일방적 재정지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의 일정사항에 대해 보조토록 하고 있다. 이에 포함되는 사업으로는 ①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②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③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④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⑤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⑥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다.

〈그림 1〉 자치단체장 연임제도 검토기준




전술한 바와 같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체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금창호 외, 2010). 첫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의 제도화가 미흡하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양자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등이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활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대부분은 특정 사업 중심의 임시적 협력에 불과하여 지속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능과 인력 및 조직간 연계처럼 제도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방교육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부족하다. 전술한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분리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한계를 갖게 된다. 지역단위의 교육계획 수립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이 반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부지의 확보나 유해환경의 예방 등에서도 체계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셋째, 지방교육의 책임이 분산되고 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운영으로 실제 지방선거에서 교육문제가 중요도만큼 정치적 관심사로 대두되지 못할뿐더러 교육행정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어 명확한 소재파악이 곤란하다. 다시 말하면, 지방교육이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전가하는 회피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넷째, 일부기능의 중복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력, 예산 및 시설관리 등의 분야의 중복과 더불어 유해환경의 예방이나 학습프로그램에서 양자 간 기능중복이 발생되어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즉, 일부 동일한 기능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중투자를 초래하는 중복현상이 존재한다. 다섯째, 재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분리현상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법정전출금과 비법 정전출금 등의

재원지원의 규모는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교육재원에 대한 책임은 커지나 이의 효율적 지출을 담보할 수 있는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권한은 없다. 즉, 교육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확보되지 않은 분리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표 1〉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분리구조의 문제점

| | |
|---|---|
| 집행기능의 분리 | ■ 연계의 제도화 미흡 |
| | ■ 지방교육에 대한 종합적 접근 부족 |
| | ■ 지방교육의 책임 분산 |
| | ■ 일부기능의 중복 초래 |
| | ■ 재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분리 |

## 3. 역대정부의 정책과 한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체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왔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역대정부의 정책은 대체적으로 관련집단의 이해관계를 수렴하여 규범적 정책 지향성을 보여 왔다(금창호 외, 2011).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한 교육자치에 관한 정책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당시의 교육자치에 대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에 따라서 지역교육의 역량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부족하고, 학교부지 확보 · 유해환경 규제 · 급식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력이 부족하며,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자치의 개선정책으로 ①분리된 의결기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교육특별위원회의 설치로 통합을 도모하고, ②교육감 선임에서 시 · 도지사와 교육감의 연계를 강화하며, ③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특히, 교육자치의 실시단위를 기초로 하는 것을 제외하면, 의결기능의 통합과 집행기능의 연계강화 등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교육자치의 개선에서는 전술한 참여정부와 정책적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자치의 개선을 위한 '교육자치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자치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내용을 수립하였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2). 동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르면, 현행의 교육자치는 참여정부에서 진단한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동시에 교육분권도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자치의 개선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교육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양자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자치에 대한 정책내용을 보면, 추진전략의 탄력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에 초점을 두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는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실시를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교육분권의 확대를 추가적인 정책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양 정부 간에 일관되게 유지되는 정책내용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적 맥락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존정부들과 달리 박근혜정부에서는 재정지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금창호, 2013).

역대정부에서 추진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구조의 개선은 현실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이의 원인은 정책대안의 내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추진전략의 한계로 보여진다. 기본적으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대안은 단기적으로 연계강화이고, 장기적으로 양자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정부차원에서 여하히 실천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접근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의 정부정책은 이전정부에서 마련된 정책대안의 효율적 추진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표 2〉 교육자치에 대한 역대정부의 정책기조

| 구분 | 정책기조 |
|---|---|
| 노무현 정부 | – 의결기능의 통합<br>– 교육감 임명의 시 · 도지사 연계강화 방법 마련<br>–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실시 |
| 이명박 정부 | – 교육분권의 확대<br>–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br>– 단기적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강화 |

## 4.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향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구조 개선은 그간의 경험에서 보듯이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할 때 현실화가 용이하지 않은 정책의 하나이다. 따라서 사전에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금창호 외, 2011).

첫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구조 개선은 장단기의 정책으로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양자 간 연계체제의 운영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구조 개선은 궁극적으로는 양자 간 통합에 목표를 두되,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육계의 긍정적 시각을 도출하는 절차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정책의 추진주체를 전략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구조 개선에 대한 공식적인 주체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다. 이는 교육자치가 교육분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정책인 까닭에 정책수립의 주체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인 것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과 추진방법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의 역할만으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단체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추진방법이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시범실시를 통해서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등 그간에 제기된 교육계의 우려를 현실적으로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후에 시범실시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전면실시의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금창호, 2010.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확대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2011. 교육자치-지방자치 일원화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금창호, 2013. 신정부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 발표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2. 지방분권 백서.

# 선진국의 지방 교육자치제도
## 미국, 일본, 독일



**윤영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교육감선거 개편안을 놓고 직선제 유지와 임명제 전환 여부에 대한 찬반론의 대립이 있다. 직선제 폐지의 입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이미 정치화 되어버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제한적 직선제[1]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직선제 운영과정에서의 문제가 직선제 자체의 문제일 수는 없으며,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오는 6월 종료되는 교육의원[2] 일몰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수 · 진보단체 모두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감을 감시 · 견제하는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면 권력분립 원칙이 깨져 교육감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 · 도지사들은 일반자치의 틀 속에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교육감 선출도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 · 도지사

1) 제한적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부모 · 교직원 · 교육기관 종사자가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의원제도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시의원과는 별도로 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러닝메이트 출마 등을 선호하는 반면, 대다수의 교육감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반자치와의 연계 · 협력 강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회 · 김대욱 · 오대영, 2011). 어떤 방식을 택하든 교육자치제도의 운영은 최선의 대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결국 한 사회의 사회적 합의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우리의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미국과 독일, 일본의 교육자치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특정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외사례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 모색을 위한 노력과 관련 논의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1. 미국 : 지역 중심의 교육제도[3)]

미국은 각 주마다 주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제도를 통틀어 일반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보통 주정부에서 교육전반에 관한 행정책임은 주 교육감(State Superintendent)이 맡고 있다. 교육감은 주에 따라 선거나 임명방식으로 선출된다. 선거도 무소속으로만 출마할 수 있는 주가 있고, 정당소속이 허용되는 주도 있으며, 임명 역시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가 하거나 주지사가 하는 등 다양하다.

2002년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ren Left Behind; NCLB)[4)] 실행 이후 교육분야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영향이 커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교육자치는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지역교육위원회(Local Board of Education)와 집행을 담당하는 지역교육청에서 시작된다. 지역교육위원회의 역할은 교육정책에 관한 권위를 가지고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지역 교육구의 예산 설정과 집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지역교육청은 그 학군에 있는 각 학교의 학사일정을 담당하지만 학교 운영은 학교의 대표인 교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즉 학교의 질과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과 방향 제시는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현장에 해석되고 적용되는가는 각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의 교원들에게 달려 있다. 지역교육청의 교육장(Local Superintendent)은 지역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지역교육위원회가 지역교육장의 업무수행이나 철학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재계약을

3) 양승실(2010)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4) 아동낙오방지법은 일반교육과정에서 학업성취도 향상과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미국의 각 주에서 정한 성취도 기준을 평가를 통해 만족시켜야 하며,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학교와 교사, 학생은 제재를 받도록 한 법이다. (http://www2.ed.gov/policy/elsec/guid/states/index.html)

하지 않고 다른 교육장을 찾는 모집광고를 낼 수 있다. 미국의 교육자치가 지역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은 지역 교육장의 자격제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주 교육감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미국시민, 그리고 그 주의 투표권을 가진 주민으로 최소의 자격요건을 제시하지만, 지역 교육장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교육 관련 석사학위 이상과 교육행정 경력과 교사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풀뿌리 교육자치가 상대적으로 가능한 것은 지역교육 예산의 65퍼센트 정도가 그 지역정부에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교육은 지역의 문제다"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에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 정부나 연방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끼어들 여지가 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2. 독일 : 주정부 중심의 교육제도[5)]

독일 교육자치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주의에 따른 교육자치권(Bildungshoheit: Landerhoheit im Schulwesen) 원칙으로 각 주에 문교부(주에 따라 교육관련 부서의 명칭이 다름)를 두고 학교교육과 교육에 관해 그 주만의 법과 규칙을 실현하는 점이다. 따라서 각 주의 내각이 주 별 선거에 따라 다른 정당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육정책도 주마다 상이한 특징을 나타낸다. 이런 문제로 인해 독일 전체 연방 차원에서 교육제도의 최소한의 일치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독일 연방의 주문교부장관상설회의(Kultusministerkonferenz : Sta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a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라는 제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주의 문교부(Kultusministerium)는 학교감독, 교육계획 수립, 수업조직, 입학과 졸업규정, 교직과정, 교사연수와 임용, 교원의 근무규정 등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와 조정, 그리고 청소년 활동지원이나 스포츠센터 설립을 위한 재정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주의 문교부 장관(Kultusminister)은 주 문교부의 수장으로 연방 교육부의 전반적인 과제를 주 정부 내각의 방침 하에 자주적으로 실행하고 책임을 진다. 주 문교부 장관은 주 정부 수상이 임명하며, 주 문교부 운영의 원칙과 법제정에 관한 문제는 주 정부 내각이 결정한다. 주 문교부 장관은 주 정부와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독일은 강력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으나, 초 · 중 · 고 교육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이 주 정부에 있어 학교체계가 일관적이지 못하고, 재정부족이 있어도 연방정부의

5) 이보영 외(2012)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개입이 허락되지 않아 연방주의 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과 연방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주 정부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3. 일본 : 분권과 집권의 균형점 모색[6)]

과거 일본의 교육행정체제는 기관위임사무, 국고부담금, 보조금 등을 통해 국가가 지방을 통제 · 관리하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였으나, 1990년대 이후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중앙행정의 권한을 축소해 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부과학성-도 · 도 · 부 · 현 교육위원회-시 · 정 · 촌 교육위원회-단위학교로 상위하달식 체제이며, 이런 이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교육위원회 간의 관계와 협력체제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생애학습,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교육위원회 제도의 의의로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지속성과 안정성의 확보, 지역주민의 의향 반영 등을 들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의 중요사항과 기본 방침을 결정하는데, 교육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교육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형태다.

일본은 지방분권 추진의 일환으로 광역 및 기초단위 교육행정체제로 교육권한 이양 등이 추진되었으나, 동시에 문부과학성의 시정요구권 등 중앙의 교육행정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있었다. 이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행정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자치단체장이 교육위원의 임명과 교육장의 내정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목적달성이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실상 형식화된 교육위원회제도에 대한 개혁이 논의 중인데, 중앙교육심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교육장을 임명하게 하고, 교육위원회는 한 발 물러선 입장에서 교육장의 사무집행을 점검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장의 사무집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7)]

---

6) 이보영 외(2012), 고전(2010)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7)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의 해외교육동향.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 EpnicGlobal.php)

〈참고문헌〉

고 전, 2010.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혁의 쟁점과 시사점. 한국교육, 37(4): 187-206.

김경회 · 김대욱 · 오대영, 2011. 지방교육자치 권한에 대한 시 ·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식차이분석. 한국행정연구, 20(3): 201~230.

양승실, 2010. 지방교육 행 · 재정 체제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보영 · 정수정 · 최지선 · 옥현주 · 허서희 · 김지영 · 이근진, 2012. 각국의 교육행정기관 분석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 인천 남구, 둘레길 따라 역사의 숨결 속으로

# 비류 백제의 도읍지인 문학산 주변에 조성된 '학산 둘레길'

해외 여행길의 첫 관문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인천은 비류백제의 도읍지였으며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유서 깊은 장소다. 최근 인천 남구 문학산에 조성된 학산 둘레길은 이러한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는 곳이다. 백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지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많이 소실됐지만 다시 복원되고 재정비돼 둘레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볼거리에서 역사의 흔적을 '언뜻' 찾아볼 수 있는 소소한 재미를 선사한다.

**학산 둘레길 코스(약 4km)**

문학레포츠 공원 → 학산서원 터 → 갑옷바위, 술바위 → 삼호현 → 문학산성 → 길마산 전망대 → 산신우물 → 인천도호부청사 및 인천향교

## 비류 백제의 도읍지인 문학산이 자리한 인천 남구




인천의 옛 지명인 미추홀은 비류백제가 문학산 자락에 정착하여 부르면서부터 생겨났다. 해발 213m의 야트막한 문학산이 자리 잡고 있는 남구는 인천 역사의 발상지이자 변천사를 간직한 문화 중심지다. 인천 남구 문학동에 위치한 문학산 주변으로는 백제 때의 유적인 문학산성과 인천향교, 도호부청사 등 유형문화자산과 함께 서해안 풍어제, 은율탈춤 등 인천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학산 또는 남산이라고도 불리는 문학산 일대에서는 선사시대 유물인 고인돌을 비롯하여 돌도끼, 돌화살 등 신석기시대 유물이 다수 발견됐다. 또 고려시대의 문학사지, 조선 전기 건물인 문학 문묘와 인천부청사의 건물 일부가 남아 있으며 학산서원지 · 안관당지 · 사모지고개 · 술바위 등도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문학산 자락에 조성된 학산 둘레길은 전통시대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돼 있는 문학산의 등산로를 재조명하여 '남구 역사 바로알기'와 '자연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된 탐방로다. 학산 둘레길 초입에서 만날 수 있는 문학레포츠 공원은 둘레길을 걷기 전에 간단히 몸을 풀거나 간식을 먹으며 약간의 휴식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다. 문학레포츠 공원은 문학공원 내 레포츠 시설지구로 체력단련, 어린이놀이터, 피크닉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자주 이용하고 있다.

문학레포츠 공원을 빠져나와 조금 걷다보면 학산서원 터를 나타내는 표지석과 돌담이 있다. 나름 유서 깊은 장소라 서원이 지금까지 보존돼 있으면 좋으련만 본채는 없고 터만 남아있어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학산서원은 인천 유일의 사액 서원으로 1708년(숙종 34년) 창건 이래 1871년(고종 8년)에 단행된 서원정리에 따라 사라졌으며 남아있던 터마저도 문학산 터널공사로 인해 그 흔적조차 소실됐었다.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인천시립박물관의 도움을 받아 추정지로 예상되는 자리 서쪽 편인 현재의 위치에 지금의 '학산서원터'라는 표지석이 설치됐는데 현재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 재미난 전설이 내려오는 '갑옷바위'와 '술바위'

학산서원터에서 사모지고개로 방향을 틀면 재미난 전설이 얽혀있는 '갑옷바위'와 '술바위'를 만날 수 있다. 옛날 한 장군이 인천에 난리가 나면 구해 준다고 하며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바위 밑에 갑옷과 투구를 숨겨 놓았다.

그러나 이곳을 지키는 무당이 호기심에 숨겨놓은 장군의 갑옷을 확인하려 바위를 깨뜨리기 위해 도끼로 바위를 내리치는 순간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바위 중간이 깨져버리면서 갑옷도 사라져 버렸다. 그 이후로 갑옷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도보로 약 3분 정도 거리, 사모지 고개를 사이에 두고 갑옷바위 맞은편에 위치한 술바위는 옛날에 신기하게도 술이 나왔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바위다. 사모지 고개에 접어들어 쉬어 갈 때 바위에서 여인이 나와 맛좋은 술을 3잔 권하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술 3잔을 다 비우고 나서 더 마시려 하자 여인은 사라지고 그 이후로 다시는 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다소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흔하디흔한 바위에 전설이 얽혀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바위를 찬찬히 보게 만든다.

술바위에서 설렁설렁 약 5분 내외로 걷다보면 사모지고개에 다다르게 된다. 사모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이유는 4세기경 백제에서 중국으로 출항하는 배를 댄 곳이 연수구에 위치한 한나루(능허대)였는데 문학산 사모지고개(삼호현)가 바로 그곳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였다. 중국으로 가는 사신을 배웅하는 가족들이 '잘 다녀오시오' 세 번 인사하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하여 삼호현이라 했는데 이후 사모지고개로 그 지명이 바뀌었다.

사모지고개를 지나 조금 더 오르면 산 정상부의 돌로 만든 산성인 문학산성에 도착한다.

'미추홀 고성', '남산성'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 문학산성은 정상의 봉우리를 돌로 둘러싸면서 축조됐다. 성의 둘레는 내성이 100m, 외성이 200m로 예전에 성 안에는 봉수대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야트막하지만 문학산의 정상이니만큼 거칠 것 없는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데 문학산성에서 약 15분가량 걸어가면 문학산의 다섯 봉우리 중 길마산에 위치한 길마산전망대에서 문학경기장, 인천향교, 인천도호부청사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가는 길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봄기운이 완연한 풍광을 한껏 즐겨보는 것이 좋겠다. 길마산전망대를 끝으로 하산을 시작하면 내려오는 중간에 태기가 없는 사람이 치성을 다하면 아이가 생긴다는 산신우물을 만날 수 있다.

## 시간이 멈춘 듯,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인천도호부청사와 인천향교**

문학산 끝자락 학산 둘레길의 마지막 코스는 옛 역사의 숨결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인천도호부청사와 인천향교다. 인천에 도호부가 설치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초기 학자이자 명신인 강희맹이 쓴 인천부 '승호기' 에 1424년 이미 객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최소한 그 이전에 도호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도호부에는 부사의 집무처인 동헌, 내동헌 등 15~16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현재는 문학초등학교 교정에 객사와 동헌 일부만 보존돼 있다. 현재의 위치에 재현한 건물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화도진도를 근거로 객사, 동헌, 공수 등 7동의 건물을 복원한 것이다.

인천도호부청사 재현물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인천향교는 신증동국여지승에 최항(1409년~1474년)의 향교 중수기가 있어 조선 세조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향교의 주요 건물로는 공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대성전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성현의 위패를 모신 동 · 서무, 교육생들의 강당인 명륜당, 유생들의 처소인 동 · 서재 등이 있다.

병자호란 때 인천향교는 불타 없어지고 위패만 모시다가 숙종 27년(1702년)에 지금 향교의 모습으로 다시 축조됐다. 인천도호부청사와 인천향교에서는 추석, 설, 단오, 정월대보름 등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에 다양한 전통체험 행사가 수시로 열리니 참여하고 싶다면 미리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방문하길 추천한다.

– 사진제공 인천남구청

##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시,

# 풍부한 수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광 메카를 꿈꾸다



수천 년을 쉼 없이 흐르고 있는 낙동강이지만 주변에는 지금껏 흘려보내지 않은 많은 시간의 흔적들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물을 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강 주변 시간의 흔적을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



안동호 보조호수에 조성중인 개목나루는 금년 5월이면 개장한다. 이곳에는 13인승 규모의 나룻배를 비롯해 나루터와 명주촌, 주막촌, 야외무대, 경관조명, 나룻배 등이 조성되어 '나루문화체험촌'으로 탄생한다. 7~8월에는 이 곳 공연장에서 고택뮤지컬 '퇴계연가'도 상설 공연될 예정이다. 개목나루와 연결된 안동호반나들이길도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안동호반나들이길은 주말이면 3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등 월영교와 함께 안동 최고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석빙고에서 법흥교까지 2㎞에 걸쳐 조성된 이 길에는 산책로와 육각정, 목교와 데크로드, 로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다.

낙동강 시내구간은 동력선과 무동력선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영호대교를 기준으로 동력선과 무동력선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한다. 영가대교에서 영호대교 구간은 카누, 윈드서핑 등 무동력선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영호대교에서 안동대교 구간은 수상스키, 보트 등 동력선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접안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앞 둔치 주차장 수변과 태화동 어가골 둔치 주차장 수변에 동력선과 무동력선 접안시설을 따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와룡면 산야리에 개장한 수상스포츠 카누훈련센터도 본격 가동되고 있다. 개장 이후 포항시청, 경북도청, 인천해양경찰청에 이어 카누국가대표 전지훈련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카누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해 월영교 일원에서 연간 61일 동안 카누 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도 요청해 놓았다.



임하호에는 '임하호 수상레저 타운'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임동면 중평리와 수곡리 일원 15만㎡에 오토캠핑장과 수상계류장, 전망대, 등산로 등이 2016년까지 조성된다. 현재 토지보상과 함께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이곳에는 민자유치를 통해 수상스키와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시 등 수상레포츠클럽과 수상골프연습장, 관광유람선 등이 들어선다.

낙동강 주변 공원들도 속속 개장을 앞두고 있다. 낙동강 주변에 조성된 공원은 남후면 무릉리의 백조공원과 단호리의 단호샌드파크, 하아리의 하아그린파크가 올 상반기 일제히 개장한다.

국내 최초로 남후면 무릉유원지 인근에 조성한 백조공원은 지난 연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는 관리동과 백조부화장, 검역장, 생태연못, 관찰로, 육각정자 등이 조성되어 있고, 2011년 네덜란드로부터 들여 온 백조 30여 마리가 적응훈련을 받고 있다. 앞으로 백조 알을 부화시켜 종족을 번식시킨 후 일정수준의 개체 수가 확보되면 낙동강 등에 방사해 텃새화 한다는 계획 아래 4월 말쯤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낙동강 수변을 활용해 조성한 단호샌드파크와 하아그린파크도 곧 개장을 앞두고 시험가동중이다. 남후면 단호리에 조성한 단호샌드파크는 낙동강 수변의 넓은 백사장과 맑은 물을 활용한 가족단위 휴양공간이다. 이 곳에는 전통마당과 텐트야영장, 주차장 등



다양한 수변시설이 들어서 있고, 6인용 8대와 4인용 4대 등 12대의 카라반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다. 이달 8일과 15일에는 카라반 캠핑의 장단점 분석을 위해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도 실시하고 있다. 이곳도 4월 말쯤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마무리된 청소년 수련시설 하아그린파크는 6월 말 개장한다.

하천종합실험센터와 인접한 18만8천㎡ 부지에 조성한 하아그린파크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200명 수용규모의 생활관이 조성됐다. 또 수련의 숲, 다목적광장, 서바이벌 게임장, 생태습지 관찰원,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 축구장, 농구장 등이 마련되어 있어 최고의 수련시설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해 안동만의 색깔과 정체성을 보유할 수 있는 '안동호주변 장기발전 종합계획'도 마련됐다. 종합계획은 안동호를 문화관광단지권과 절강리권, 3대 문화권, 도산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이 추진된다. 문화관광단지권에는 381만㎡로 확장해 연수시설을 유치하고 체험동물원, 루지체험장, 모노레일, 민물고기박물관과 모터보트 경정장 등이 추진된다. 절강권은 주진교 일원 번지점프와 서바이벌장, ATV 체험장 등 주진레포츠 단지조성과 배스타운 조성, 절강리 힐링빌리지 조성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미래 보물단지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 안동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소개합니다

- 하회탈 : 오리나무를 깎아 한지를 입히고 채색한 후 옻칠을 해 만든 가면으로 별신굿에 쓰였으며, 각시탈 · 중탈 · 양반탈 · 선비탈 · 초랭이탈 · 이메탈 · 부네탈 · 백정탈 · 할미탈, 그리고 2개의 주지탈 등 10종 11개가 전해진다.

- 안동포 : 기후와 토질의 영향으로 최고의 옷감으로 손꼽히며 올이 가늘고 노란빛이 나는 대마포로 조선시대에는 궁중에 진상되기도 하였다. 임하면 금소리에서 생산되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었다.
- 안동한지 :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자랑하는 풍산한지는 국내산 천연 닥나무를 원료로 하여 전통의 방법으로 만들어 빼어난 흡수성과 발산성이 있으며 창호지, 도배지, 장판지, 등에 사용된다.
- 안동산약(마) : 위장 · 폐 등의 기능 보호와 당뇨 · 변비 등에 효능이 큰 자연식품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며, 깊은 자연 속에서 재배되어 자연의 향이 듬뿍 담긴 신토불이 건강식품이다.
- 안동사과 : 토양과 기후조건이 가장 적당한 곳에서 생산되며 색상이 선명하고, 향기와 당도가 높은 고품질의 사과이다.
- 안동고추 : 태양초고추는 햇볕에 말려 고추 본래의 색깔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으며, 특수공법에 의한 이물질 제거와 완전 살균처리로 매콤하고 감미로운 맛과 영양이 살아있다.
- 풍산김치 : 무공해 안동청결 고춧가루와 지하 150m에서 퍼올리는 천연 광천수를 이용해 담근 김치로 전통 김치맛을 재현하였다.
- 안동소주 : 맑고 깨끗한 물과 기름진 땅에서 수확된 양질의 쌀로 빚은 순곡주로 그윽한 향취에 감칠맛이 특유한 증류식 소주로 '향으로 취하고 맛으로 즐기는 고유명주'로 뒤끝이 깨끗하다.
- 안동간고등어 : 대를 이어오는 우리의 맛. 오랫동안 우리들의 입맛을 지켜온 정성이 담긴 생선이다.
- 헛제사밥 : 평상시 제사가 없을 때 제사음식과 같은 재료를 마련하여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데, 각종 나물과 어물, 산적, 탕국이 곁들여진다.
- 안동국시 : 밀가루와 콩가루로 만든 국수에 육수를 넣고 그 위에 애호박을 볶은 꾸미와 실고추, 파, 지단을 고명으로 얹어먹는 안동 특유의 향토음식이다.
- 안동식혜 : 고두밥에 무와 고춧가루, 생강즙, 엿기름, 물로 발효시켜 시원하며 맵고 달콤한 맛이 배어나는 독특한 향취가 뛰어난 계절음식이다.
- 안동한우 : 맑고 깨끗한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독특한 사육방법으로 키우며 육질내 지방이 고르게 분포되어 특유한 맛과 향이 있다.

• 안동찜닭 : 육질이 좋고 신선한 닭과 감자, 시금치, 대파 등의 야채와 당면이 어우러져 매콤하면서도 달콤하여 담백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적은 비용으로도 여러 사람이 정감을 나눌 수 있다.




– 사진제공 안동시청

## 제1차 정책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개최



**일　　시** / 2014. 3. 6(목) 10:30~12: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3월 6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1차 정책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제2차 위원회별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보고회 개최



**일　　시** / 2014. 3. 10(월) 11:00~16: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3월 10일 월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2차 위원회별사업 계획 및 운영방안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 세미나 개최



**일　　시** / 2014. 3. 11(화) 14:00~16:3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3월 11일 화요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오성호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 방안',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 제2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 개최



**일　　시** / 2014. 3. 14(금) 07:30~09: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3월 14일 금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2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류영아 수석연구원이 '사각지대 옴부즈만 제도 도입'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제5차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2014. 3. 17(월) 14: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3월 17일 월요일과 18일 화요일, 양일에 걸쳐 '제5차 연구심의위원회(광역시 · 도 정책연구과제 및 자체연구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제3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 개최

**일　　시** / 2014. 3. 20(목) 09:30~11: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3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이소영 연구위원과 최인수 수석연구원이 '외국인주민 집거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체계 개선'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 청사 신축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일　　시** / 2014. 3. 24(월) 15: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3월 6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1차 정책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한국-베트남 간 '도시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경험 및 사례 공유 국제세미나

**일　　시** / 2014. 3. 19(수) 13:30~17:40
**장　　소** / 베트남 하노이 Knowledge Palace Buildings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가천대학교, 한국지역개발협회, 베트남 내무부




한국국제협력단, 가천대학교, 한국지역개발협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베트남 내무부, 베트남 도시개발계획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베트남 간 '도시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경험 및 사례 공유 국제세미나가 3. 19(수) 베트남 하노이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승종 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과 정부 3.0'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고 김현호 지역발전연구실장이 '한국의 지역개발정책과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다.

## 발간물

● 「지방자치 Focus」 제70호 발간

**제 목** / 교육감의 위상과 선임방식의 개선방안
**저 자** /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

● 「지방자치 Focus」 제71호 발간

**제 목**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2) :
마을기업형, 지역자원형, 평생학습형 등
**저 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 최인수 수석연구원



## KRILA 교육연수

● 2014년 상반기 교육일정

| 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일정 |
|---|---|---|
| 지역통계활성화 | 2박 3일 (19시간) | 제1기 2. 19(수) ~ 2. 21(금) |
| | | 제2기 4. 16(수) ~ 4. 18(금) |
| | | 제3기 6. 18(수) ~ 6. 20(금) |
|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 2박 3일 (21시간) | 제1기 3. 12(수) ~ 3. 14(금) |
| | | 제2기 5. 21(수) ~ 5. 23(금) |
| | | 제3기 7. 9(수) ~ 7. 11(금) |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 2박 3일 (21시간) | 제1기 2. 26(수) ~ 2. 28(금) |
| | | 제2기 4. 9(수) ~ 4. 11(금) |
| | | 제3기 6. 25(수) ~ 6. 27(금) |
| 주민행복 마을 만들기 | 2박 3일 (21시간) | 제1기 3. 5(수) ~ 3. 7(금) |
| | | 제2기 4. 23(수) ~ 4. 25(금) |
| | | 제3기 6. 11(수) ~ 6. 13(금) |
| 지방 3.0 | 2박 3일(21시간) | (추후 공지) |

※ 담당자 : 김유숙 / 02-3488-735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실천포럼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극

지구상의 마지막 미개척 대륙,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자연과학의 거대 실험장,
막대한 자원을 보유한 기회의 대륙!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기지 "장보고과학기지"를 통해
극지의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발견하여
극지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 ▣ 기지 개요

- 위치 : 동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
- 기간 / 총사업비 : 2006 ~ 2014년 / 1,067억원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4,458㎡
  (건물 16개동 및 시설 · 장비 24개소)
- 수용인원 : 동계 15명, 하계 60명

## ▣ 활용 계획

- 남극대륙 중심의 기후변화(빙하, 대기과학, 지체구조, 생태계 변화 등), 우주과학(고층대기, 운석, 우주 생물 등) 연구 중점 수행
- 본격적인 남극 내륙 진출의 허브기지로 활용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PRI 극지연구소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9

www.krila.re.kr